

토론회

'정의연 **오브**서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화관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 용혜인 · 홍익표

공동주관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순서

사회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개회사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3p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4p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p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7p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 실태와 문제점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9p
	정의연 오보사태 원인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전 오사카총영사	22p
토론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	30p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34p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38p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42p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52p

개회사

더 나아가기 위한 냉철한 분석, 성찰의 시간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금도 그때 일들이 ‘스냅샷snapshot’처럼 선명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거친 파도를 쪽배 하나로 견뎌야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는 순간, 섬광처럼 쏟아지던 무수한 불화살들. 아,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절멸이구나... 끝도 모를 무자비한 공격에 간당간당 목숨 줄 겨우 붙들고 있을 때, 결국 가장 선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통함에 허우적덜 틈도 없이 ‘살아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견디고 있을 무렵, 기적처럼 나타난 수많은 쪽배들을 기억합니다. 작은 등 하나 갑판에 달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에워싸며 같이 화살을 맞거나 되받아 쳐주던 많은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덕분에 3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어둠은 우리 모두를 덮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격의 칼날은 전방위적입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3년 전 ‘그 일’ 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우리의 절망과 분노, 못다 푼 소회를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기 위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더 무거운 갑옷을 입기 위한 호흡 고르기 의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생을 지속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기꺼이 마음 내주시고 에너지를 모아주신 의원님들, 민연련 관계자 분들,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갈을 길 기약하기 어려운 빛을 또 졌음을 승구하게 생각합니다.

개회사

반성 없는 정파적 센세이셔널리즘을 끝내야 합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언론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의도적으로 거듭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그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면 그건 단순실수로 인한 오보가 아니라 정략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봐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언론권력에 의한 폭력을 용인하자고 존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1991년 5월 전민련 활동가 김기설 씨의 분신자살 사건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군의 죽음에 분노한 청년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갈 때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언론은 김기설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내세우며 김기설 씨 동료 강기훈 씨에게 유서대필과 자살방조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1991.5.10.일자)에서 “자살과 시신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배후세력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민주화운동의 구심이었던 전민련은 잔인한 음모집단으로 매도되었고, 민주화운동에 헌신적인 활동가들은 몰상식한 생명파괴자로 몰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언론권력에 의한 프로파간다와 정파적인 센세이셔널리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대해 조선일보(2023.5.16.일자)는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 아래 출처도 불분명한 목격자의 말을 인용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모략입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주거나 받거나 ‘의혹’을 키우고 몰타기와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연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 역시 무분별한 검찰 받아쓰기, 검증 없는 편향보도, 자극적인 제목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는 측면에서, 정파적 센세이셔널리즘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정의연 사태에 대한 보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전반이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아직 1심 결과일 뿐이라서 법적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언론이 경쟁적으로 받아쓰기 보도를 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어긋난다는 점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언론이 책임 있게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출처’와 ‘검증하지 않는 언론의 부작위성’이 빚어내는 언론폭력에 대해 엄중한 성찰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희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김상희 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과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특히 과거부터 언론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군사정권, 독재의 위협 속에서도 진실된 보도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의기억연대 논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명백한 오보와 왜곡보도는 우리 언론이 과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정의연의 국고보조금, 기부금 그리고 안성 쉼터 관련 검찰의 기소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정의연 활동가는 무죄, 윤미향 의원도 대부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13건의 언론보도 중 11건은 정정보도, 삭제 등으로 강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언론은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아니면 말고’ 식 편향된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결정을 내려도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정의연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 실태와 문제점, 오보와 왜곡보도의 원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다시금 성찰하고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조선희 민연련 활동가님과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님과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님,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님,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님 그리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얼룩진 위안부 운동,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용혜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기본소득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3년 동안 이어졌던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향한 무더기 오보 및 왜곡보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한국 언론이 나아가야 할 저널리즘의 원칙을 되새기는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만, 지난 정의연 사태에서 언론은 ‘권력 감시’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녀사냥’에 몰두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리고, 언론은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허위보도를 남발했습니다. 아무리 정의연과 윤 의원이 해명과 반론을 해도, 문제 제기에 논리적 허점이 있어도 언론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카더라식 언론 보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올해 2월 1심 판결에 의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의 대부분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정의연 사태는 30년 위안부 운동에 커다란 타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의연 마포 쉼터의 소장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언론도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점점 사법화되고, 검찰의 무분별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연한 작금의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언론의 무분별한 검찰 수사 받아쓰기, 허위보도 남발 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상희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귀한 의견 내어주신 모든 발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의연 사태에서의 언론 문제를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아울러 정의연 사태로 인해 얼룩진 위안부 운동이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제발표

주제발표

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 실태와 문제점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1. 들어가며

언론, 이용수 선생 기자회견을 왜곡하다

2020년 5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결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수 선생은 국회로 가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며 △한일 국민 간 건전한 관계 구축을 위해 학생 간 교류와 공동행동 등 넓히는 교육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투쟁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극복하고 시민사회단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15년 졸속합의 관련 시민사회 의견수렴 과정 및 정부 관계자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해 돈을 유용하고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줬으며 치매 상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기부하게 했다’입니다. 이용수 선생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방향성과 시민사회단체의 운동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언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용수 선생 기자회견 관련 보도 중 보도량이 가장 많은 주제는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부실 관리’,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언론은 윤미향 의원의 시민단체 활동가 당시 월급과 자녀 유학비가 얼마인지 궁금해 했고 시민단체 회계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맥줏집 3300만 원 지출’ 오보 등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의 집중적 의혹제기와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 언론이 이를 다시 받아쓰는 과정 등을 통해 의혹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 사이 30년 넘는 역사의 ‘위안부’ 운동의 성과는 퇴색되고, 시민운동 및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2023년 2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활동가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언론은 이전 보도에 대한 반성 없이 기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거나 법원 판결 또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20년 언론보도에서 나온 주요 문제제기를 되돌아보고, 특히 의혹을 집중 제기한 언론의 경우 무엇을 근거로 기사화하였으며 그 뒤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정의연 사태’ 또는 ‘윤미향 사태’ 촉발엔 저널리즘 원칙을 잊은 언론보도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사실 확인과 취재 없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키운 악의적 왜곡보도 및 무책임한 오보 등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보도’ 모니터링 개요

민언련은 정의연 관련 의혹 보도가 집중된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윤미향’ 또는 ‘정의기억연대’로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전체 보도를 살펴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중 언론보도로 촉발된 쟁점을 선별, 10개 의혹을 정하고 해당 의혹별로 언론보도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느 언론사의 어떤 기사로 의혹제기가 시작되었는지, 기사의 출처와 구성은 어떠한지, 첫 보도 이후 보도 양상은 어떠한지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의혹	맥줏집에서 하룻밤 3300만원 썼다?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아파트 샀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딸 유학 보냈다?
	정의연, 윤미향 아버지에게 일감 몰아줬다?
	정의연, 윤미향 배우자에게 일감 몰아줬다?
	안성 심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길원옥 할머니 치매 이용해 돈을 빼갔다?
	윤미향, 개인계좌로 장례비 모아 횡령했다?
그 외	2015년 ‘위안부’ 협정 때 일본에서 10억 엔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2,300만 원만 썼다?
	수요집회 성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정대협은 정신대 단체인데 위안부 단체로 활동했다?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 아이돌 팬클럽에서 기부한 패딩을 할머니들이 못 받았다?
	안성 심터를 불법 증축했다?

△ 2020년 5월 이후 정의연·윤미향 관련 언론이 제기한 의혹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2. 쟁점별 보도 실태와 문제점

10개 의혹별 첫 보도

의혹	날짜	언론사	기사 제목
맥줏집에서 하룻밤 3300만원 썼다?	2020-05-11	한국경제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2020-05-15	조선일보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	2020-06-16	조선일보	[단독] 윤미향의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아파트 샀다?	2020-05-18	중앙일보	[단독] 광상도 "윤미향 2012년 2억원대 아파트 경매로 현금구매"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딸 유학 보냈다?	2020-05-11	조선일보	딸 미국 유학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원
정의연, 윤미향 아버지에게 일감 몰아줬다?	2020-05-15	한국일보	[단독] 위안부 피해자 '쉼터'엔 할머니들이 없었다
정의연, 윤미향 배우자에게 일감 몰아줬다?	2020-05-13	중앙일보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
안성 쉼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2020-05-15	한국일보	[단독]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길원옥 할머니 치매 이용해 돈을 빼갔다?	2020-06-12	조선일보	[단독] 할머니 가족 "숨진 소장이 돈 빼내" 정의연 "이들이 돈 요구"
윤미향, 개인계좌로 장례비 모아 횡령했다?	2020-05-14	중앙일보	[단독] SNS서 기부금 모금, 윤미향 개인계좌 3개로 받았다

△ 10개 의혹 첫 보도 목록 *정정·수정 전 기사 제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보도로 촉발된 10개 의혹의 첫 보도¹⁾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용수 선생 5월 기자회견 이후 2주 이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당시 언론은 과열 보도 양상을 띠었는데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2020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색 시 2주간 총 4,737건의 보도가 검색²⁾됩니다. 하루 340여 건의 윤미향-정의기억연대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뒤늦게 나온 의혹보도 두 건은 '국고보조금 셀프심사'와 '치매 이용 기부금 모금'인데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0개 의혹보도 중 조선일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 3건, 한국일보 2건, 한국경제 1건의 순이었습니다. 한국경제 1건은 단순히 기부금 사용 내역 공시자료 중 대표지급처에 기재된 내역을 갖고 '정의연 회계가 수상하다'는 식으로 쓰인 기사입니다. 국제청 공시 정보는 정의연 기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매우 부족한 자료로 실제 자금 흐름, 계좌 내역과 비교하

1) 의혹별로 첫 보도를 찾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윤미향' 또는 '정의기억연대'로 2020년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검색하여 나온 보도 목록을 살펴 의혹을 추린 뒤, 각 기사를 참조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대표적 키워드를 선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각 키워드를 검색하여 뉴스 검색 결과 창에서 '오래된순'으로 정렬한 뒤 가장 먼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찾는다. 의혹별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맥줏집-정의기억연대 3300만원 △국고보조금 사라졌다-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셀프심사-윤미향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 △아파트 구매-윤미향 아파트 △딸 유학비-윤미향 유학 △아버지 일감-윤미향 안성 쉼터 △배우자 일감-윤미향 소식지 △안성 쉼터 배임-윤미향 안성 쉼터 △길원옥 할머니 치매-윤미향 길원옥, 윤미향 치매 △장례비 개인계좌-윤미향 개인계좌.

2) 네이버 뉴스는 한 번에 4,000건 이상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로 나눠 검색했다. 2020년 5월 7일~13일은 1,510건, 14일~20일 3,227건의 보도가 검색되었다. 검색은 2023년 5월 22일 오전 10시 진행하였다.

지 않고서는 ‘회계 실수’ 이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많은 의혹제기를 낳은 보도내용입니다.

한국일보 2건의 보도는 모두 안성 쉼터와 관련된 보도로 안성 쉼터 그 자체를 수면으로 먼저 띄워 올린 언론사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안성 쉼터 배임 의혹 제기보다는 ‘안성 쉼터가 수상하다’는 실마리를 제공했는데,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해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의 2020년 5월 15일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안성 쉼터 의혹을 두고 여러 언론이 보도 경쟁을 벌입니다.

중앙일보 3건 보도 중 2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출처로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제기에 집중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이라는 태스크포스 이름과 달리 윤 의원 관련 의혹제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이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받아 보도한 기사가 다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곽 전 의원을 출처로 쓴 기사는 ‘기부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 ‘윤미향 배우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자체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의원 SNS를 보고 ‘개인계좌 모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개 의혹 보도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냈는데, 국고보조금 관련 두 개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는 의혹의 경우 조선일보가 곽 전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와 정의연, 정대협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쓴 기사 대개가 그러하듯 정의연이 실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과 보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 회계처리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의연의 실수였음에도 보조금 횡령 의혹을 낳은 기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는 의혹도 처음엔 곽 전 의원이 파헤치던 의혹을 황보승희 의원을 통해 얻은 자료로 작성된 기사로 조선일보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간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재산형성 과정·모금 과정, 전방위 의혹제기

의혹 방향	언론사	분류
국세청 공시를 보니 기부금 운영에 문제 있다	조선일보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한국경제	맥줏집에서 허룻밤 3300만원 썼다?
	한국일보	안성 쉼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재산형성 과정이 문제 있다	조선일보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딸 유학 보냈다?
	중앙일보	윤미향, 기부금 유용해 아파트 샀다?
	중앙일보	배우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한국일보	아버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보조금·기부금 모금이 문제 있다	조선일보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
	조선일보	길원옥 할머니 치매 이용해 돈을 빼갔다?
	중앙일보	윤미향, 개인계좌로 장례비 모아 횡령했다?

△ 의혹별 첫 문제제기 보도한 언론사와 의혹방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들 보도가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 공시자료를 보고 기부금 운영 의혹 제기 △윤미향 의원 개인의 재산형성 과정 의혹 제기 △보조금·기부금 모금 과정 의혹 제기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의혹 제기는 국세청 공시자료에 따른 기부금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5월 7일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중 ‘모인 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언론은 정의연 기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나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근거로 쓴 기사가 다수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은 △맥줏집에서 하루 밤 3300만원 썼다?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안성 쉼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등입니다.

이런 의혹이 국세청 자료를 출처로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윤미향 의원의 재산 자체나 가족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기부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프레임이 만든 보도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딸 유학자금이 수상하다 △윤미향 의원 아파트 구입이 수상하다 △아버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배우자의 일감이 수상하다 등입니다.

기부금을 횡령한 단서가 있어서 취재·보도한 것이 아닌 ‘윤 의원 근로소득이 적을 텐데 딸을 유학 보내고 아파트를 구입하다니 수상하다’는 식입니다.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비슷합니다.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정의연 관련 업무나 사업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살피기보다는 ‘아버지가 안성 쉼터를 관리하다니 수상하다’, ‘배우자가 정의연 소식지를 편집하다니 수상하다’는 식으로 쓰여 ‘윤 의원이 정의연 기부금으로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일조했습니다.

보조금·기부금 모금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늦게 나왔는데요. 중앙일보의 ‘장례비 개인계좌 모금’은 SNS를 보고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한 사실을 기반으로 쓴 기사였으나 ‘그렇다면 장례비를 기부금품법에 따라 미리 계획하고 모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의 ‘셀프심사 의혹’ 제기는 여성가족부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쓴 기사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뒀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차매 이용 모금’의 경우도 길원옥 할머니 양자인 목사 황 모 씨와 그 가족이 제기한 의혹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쓰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조선일보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합니다.

미래통합당 출처거나 자체 취재

사실 아니거나 불기소·무죄 처분

10개 의혹 첫 기사의 출처를 살펴보면 검찰, 정치권 등에 쏠리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언론사가 자체 취재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도 있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쓴 것으로 보이는 기사도 있습니다. 출처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의연 보도가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흘린 자료를 단순히 받아만 쓰지 않고, 언론 또한 자체적으로 정의연이나 윤 의원 관련 의혹을 취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었거나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취재 의도가 이용수 선생 기자회견 요지에 부합했던 것인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었는지 평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언론사	기사 제목	출처	결과
한국경제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자체 취재	사실 아님/불기소
조선일보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곽상도	회계 실수/불기소
조선일보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황보승희	사실 아님
중앙일보	[단독] 곽상도 "윤미향 2012년 2억원대 아파트 경매로 현금구매"	곽상도	사실 아님/불기소
조선일보	딸 미국 유학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원	자체 취재	사실 아님/불기소
한국일보	[단독] 위안부 피해자 '쉼터'엔 할머니들이 없었다	자체 취재	사실 아님/불기소
중앙일보	[단독] "정대협 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	곽상도	사실 아님/불기소
한국일보	[단독]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자체 취재	무죄
조선일보	[단독] 할머니 가족 "숨진 소장이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요구"	자체 취재 (할머니 가족)	무죄
중앙일보	[단독] SNS서 기부금 모금, 윤미향 개인계좌 3개로 받았다	자체 취재	사실 아님/무죄

△ 의혹별 첫 문제제기 보도한 언론사와 기사 내용 출처, 문제제기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① 해명·반론 있어도 의혹 부풀려 첫 보도

10개 의혹 첫 기사 대부분은 언론사 자체 취재를 통해 모은 사실과 해명, 반론을 취사선택하여 쓰였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을 출처로 했던,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했던 제기하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상대측 해명과 반론을 들은 흔적도 기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해명과 반론을 다시 취재해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명과 반론이 있었음에도 제목에 의혹을 강조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로 해명·반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한국경제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의 경우 첫 문장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일분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하룻밤에 3300여만원을 술집에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입니다. 이어 "정의연이 2018년 국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은 3억1000만원인데, 이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맥줏집에서 쓴셈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산서류 공시'를 보면 이 단체는 2018년 디오브루잉주식회사에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지출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처음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8년 디오브루잉에 기부된 3339만원은 옥토버웨스트에서 열린 후원의 날 행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인 결산서류 공시는 기자가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잘못 읽은 결과로 3,300만원은 2018년 모금사업비 지급처 50곳에 지급된 총액입니다. 두 번째 근거인 한경희 사무총장의 답변의 경우는 기자가 취재내용을 취사선택한 결과입니다. 한국경제는 정의연을 적어도 두 번 직접 취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취재에서 정의연은 "3300만원에는 옥토버웨스트 외에 다른 곳에서 쓴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기사에 나옵니다. 한국경제는 분명 공시자료에 지출내용이 한꺼번에 적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맥줏집에서 하루에 3300만원"이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셀프심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도 비슷합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고 썼지만 본문엔 여성가족부 측 해명이 나옵니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선정위원회에는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한 바 없다’고 했다”는 문구를 봤을 때 조선일보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차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여 보호하려 할 때 등록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거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보조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셀프심사’ 의혹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② 자극적 제목을 단 받아쓰기 기사

해명·반론이 있어도 ‘부풀려 쓴’ 기사, 논리적 허점이 있어도 일단 ‘쓰고 보는’ 기사, 과장도 전 의원 등 정치권 의혹 제기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쓴’ 기사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의혹에 대한 첫 기사가 나오면 다른 언론의 받아쓰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받아쓰는 기사는 첫 보도보다 더 자극적 제목을 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경제 ‘맥줏집 3,300만 원 보도’의 경우 이후 중앙일보 <정의연 참 희한한 기부…3300만원 지출 사용처는 맥줏집>(2020/5/11), UPI뉴스 <“비용 부풀렸나”…정의기억연대 행사비용 3300만원의 의혹>(2020/5/11), 조선일보 <“술집서 하루 3300만원” 위안부 단체, 이상한 장부>(2020/5/11) 등이 그러합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 5월 12일 자 ‘팔면봉’ 코너에서 “하룻밤 3339만원어치 맥주 마셨다는 위안부 단체, 결제액은 430만원. 酒量(주량)에 놀라야 하나, 뺨뺨함에 놀라야 하나”라고 비꼬며 논평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아파트 샀다’는 의혹의 경우 중앙일보 첫 보도 이후 윤 의원이 반박하고 과장도 전 의원이 재반박하는 등 논쟁이 되자 이를 다루는 기사가 많아지면서 의혹도 증폭됐습니다. 윤 의원이 중앙일보 보도 당일 아침 시사 라디오에서³⁾ 관련해 발언한 해명이 오후엔 또 다른 의혹으로 바뀌어 보도됐는데요. 머니투데이 <윤미향, 기억 착오라기엔…너무나 거짓말 같은 쉼터와 아파트>(2020/5/19), 머니투데이 <“윤미향, 그 시절 대출 없이 2주택 보유…시민활동하며 현찰부자?”>(2020/5/19), 뉴스1 <윤미향, 수년간 ‘1가구 2주택’…담보대출도 없어 자금출처 ‘의혹’>(2020/5/19), 조선일보 <배고프다한 할머니에 “돈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2020/5/25) 등의 제목을 단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첫 보도는 과 전 의원이 ‘등본을 보면 근거당 등 담보물권설정이 없다. A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것’이라며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데, 기부금 유용과 빚 없이 아파트를 구매

3) 2020년 5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해 받아쓰기 기사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빈약한 의혹 제기를 기사 제목만 더 자극적으로 바꿔 보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해명·반론 무시하고 의혹 반복 제기

게다가 해명·반론이 있어도 언론은 이를 무시한 채 같은 의혹을 무수히 반복해 제기합니다. 조선일보가 ‘국고보조금 8억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이미 “정의연 측은 본지 질의에 ‘국세청 공시는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기사는 의혹을 부풀려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정의연 반론을 들었고, 정의연이 <5.16_입장문_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정대협·정의연 법인 운영/류석춘 교수 고소장/국고보조금 2016~2018 0월 기재>를 통해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의 보조금은 정의연의 수입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의연의 수입·지출 결산서에 수입과 지출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후에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사업 집행내역도 정의연의 회계처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9년부터 결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선일보의 같은 의혹 제기는 반복됩니다.

정의연 입장 발표 며칠 뒤 조선일보는 <[단독] 정대협도 해마다 뭉치돈 사라졌다, 5년간 2억 6000만원 증발>(2020/5/19)을 신고 이번엔 정대협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경울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에게 의뢰해 정대협 공시자료를 분석해” 보니 “5년(2015~2019년)간 정대협이 기부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피해자 복지 사업 등에 쓰고 남긴 돈은 정대협이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액수보다 총 2억6000여만원 더 많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김경울 대표는 해당 기사에서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감지된다. 횡령을 포함한 범법 가능성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연 입장문에 나와 있듯 해당 공시자료는 정의연·정대협의 회계처리 오류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맞으나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비자금’,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의연은 2020년 8월 30일엔 2017년 회계내역을, 31일엔 2018~2019년 회계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 이때도 조선일보는 <[단독] 정대협, 없던 돈 8억이 어디서 생겼을까>(2020/9/4)를 신고, 이번엔 “예전 공시자료에 없던 돈 8억여원의 뭉텅이 돈이 갑자기 추가” 됐다고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합니다.

‘기부금 유용해 딸 유학 보냈다는 의혹 역시 비슷합니다. 조선일보 첫 보도 이후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딸 유학자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유학비는 배우자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소명하는데요. 1시간 뒤 조선일보는 <말 바뀐 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 조작사건 보상금으로 마련”>(2020/5/11)을 통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해놓고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 해명을 한 데 대해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윤미향, 2016년 딸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댔다고?”>(2020/5/12)를 재차 신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보도를 줄줄이 낸 의혹이 있는데, 바로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첫 보도 <[단독] 할머니 가족 “숨진 소장이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요구”>(2020/6/12)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과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 ‘조모씨’를 근거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점 사장 손모(60)씨가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돈 세탁’이란 ‘불법 경로로 취득한 재산의 출처나 소유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위장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개연성을 제시해야 하지만, 고인이 된 쉼터 소장의 반박이나 해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조선일보는 <[단독]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돈 빠져...이유 문자 쉼터소장 무릎 꿇더라”>(2020/6/17), <“2000만원, 500만원...치매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뭉치돈 나가”>(2020/6/18), <[사설] “뭉치돈 해명 요구에 무릎 꿇었다는 쉼터 소장, 너무 썩었다”>(2020/6/18) 등을 잇따라 내며 본격적으로 ‘할머니 통장에서 이체된 자금이 있다’는 사실과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길원옥 할머니 양자의 주장을 근거로 ‘치매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추가 의혹을 보도합니다. 그러자 정의연은 입장을 통해 △이미 ‘치매’ 상태였다면 최근 이뤄진 양자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 △2017년 받은 국민 성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한 것은 할머니의 송고한 뜻이었으며 이중 1천만 원은 양자에게 지급함 등을 해명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해명에 대한 취재나 재반박은 하지 않고, 해명 자체를 무시한 채 또 다른 의혹을 계속 제기합니다. <[단독] 길원옥 할머니, 쉼터 떠나며 외쳤다 “이제 우리집 간다!”>(2020/6/19), <[단독] 길원옥 할머니 성금 1억, 1시간새 1원도 안남고 다 빠져나갔다>(2020/6/28), <[단독] 현실·꿈 구분 못하는 길 할머니에 유언장 쓰게 한 정의연>(2020/6/30), <[단독] 정의연, 힘겨워한 길원옥 할머니 후원행사 끌고다녀>(2020/6/30) 등 ‘치매 이용 기부’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2023년 2월 10일,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 보도와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연 입장처럼 길원옥 할머니 양자인 황 모 씨가 법적으로 입양된 시점은 2020년 6월인데, “입양은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재산상 법률행위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인 점에 비춰 (2020년 6월) 이전의 각 기부행위도 길씨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같은 출처 돈 1억 중 1천만 원을 길원옥 할머니가 양자에 준 사실에 비춰 “길씨가 1000만 원 지급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사실 확인 부족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우선되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의연 보도에서 언론은 경쟁하듯 윤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한 의혹을 쏟아냈지만,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로 취재된 단편만 갖고 보도해 오보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언론의 ‘첫 의혹

4) <6.18_입장문_‘일부’ 언론은 고인이 되신 쉼터 소장님과 길원옥 인권운동가,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2020/6/18)

<https://womenandwar.net/kr/notice/?pageid=24&mod=document&uid=1039>

보도'가 특히 그랬습니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단편적 사실만 취재해 조각조각 보도하며 안성쉼터 사업 자체를 의심스럽게 그린 단독보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보도도 있는데요. 서울경제 <[단독] 현대중공업 “정의연, 10억 기부받자 쉼터 서울→안성 바꿨다”>(2020/5/17)는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현대중공업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서울에 짓기로 한 사업계획을 올려 기부를 받은 뒤 돌연 사업지를 경기도 안성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보도 했습니다. 다음날 <[단독] 현대중 “윤미향과 쉼터 협의로 접촉한 적 한번도 없었다”>(2020/5/18)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당시 윤 당선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르면 해당 기부금 사업은 현대중공업이 2012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우리쉼터 지원', 지정대상 '정대협', 기부금액 '10억 원'으로 지정기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마포구 소재 부동산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정대협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소통하며 '서울이 아니라 외곽이어도 무관'하다는 논의를 나누고 정대협이 서울 근교 4개 지역 20여 개 주택 답사를 진행한 뒤 해당 부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돌연 사업지를 경기도 안성으로 변경”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8월 31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는데, 그전에 윤 의원과 현대중공업 업무 담당자가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공동모금회 “정대협에 쉼터 장소 변경 제안한 적 없다”>(2020/5/18)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애당초 정대협에 장소 변경과 관련된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대협이 안성에 쉼터를 짓기로 정한 뒤 이를 모금회에 알려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1심 판결에 따르면 정대협은 2013년 2월 모금회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급박하게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정대협과 모금회에서 기부금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2013년 5월 만나 '꼭 서울이 아니라 외곽이어도 무관', '사업을 중단하면 모금회와 정대협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사업은 추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계좌 모금'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단독보도 이후 '개인계좌 모금' 하나하나 단독보도로 나왔는데요. 세계일보 <[단독] 윤미향 '베트남 우물' 사업도 개인계좌로 모금>(2020/5/18), 위키리크스한국 <[단독] '정의연 출자금' 정대협 간부 개인계좌로 모집>(2020/5/19), 동아일보 <[단독] 윤미향, '재일동포 지원금 모금' 위한 엽서 판매 대금 개인계좌로 받아>(2020/5/20) 등이 그것입니다.

정의연 보도에서 언론은 오보로 정정보도를 낸 문제의 '단독보도'에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가 '맥줏집 3300만원 기사'에 “정의연이 회계 공시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발견해 가장 먼저 시민단체 회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한국경제 기자들이 썼다”⁵⁾는 이유로 사내 이달의 기자상을 시상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중앙대언론동문회도 '시민단체들의 부실 회계 심각성을 세상에 알렸다', '시민단체 부실회계와 관련된 관리·감독 강화에 일조했다'⁶⁾며 제8회 의혈언론인상을 수여했습니다.

5) 손가영, 2020.08.02., 미디어오늘, <한국경제, 정의연 관련 정정보도 기사에 기자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13>

해당 기사는 정의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해 강제조정된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에서 “정의기억연대는 하룻밤에 3,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경제는 사내 이달의 기 자상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⑤ 무더기 정정보도에도 ‘받아쓰기 오보’는 남았다

날짜	매체명	제목	기자	조정결과	소세
2020-05-11	한국경제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양길성 김남영 김보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맥줏집 대표지급처
2020-05-19	중앙일보	[단독] ‘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곡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김준희	정정보도	팬클럽 패딩
2020-05-19	한국일보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박경우	제목수정	팬클럽 패딩
2020-05-21	서울경제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정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허진	기사삭제, 정정보도	국고보조금 증발
2020-05-19	서울경제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정의연 ‘제2옥토퍼리스트’ 의혹	허진	정정보도, 반론보도	인쇄업체 대표지급처
2020-06-09	국민일보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더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권혜숙	기사삭제	공인회계사회 장 인터뷰
2020-06-10	중앙일보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뺏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한영익	반론보도	일감몰아주기
2020-06-16	조선일보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김형원	정정보도	셀프심사
2020-06-16	조선비즈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경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김만우	정정보도	셀프심사
2020-06-16	뉴데일리	여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	이도영	기사삭제, 정정보도	셀프심사
2020-06-19	중앙일보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박현주	정정보도, 제목수정	후원금 반환 소송

△ 정의기억연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판결 대상 기사(수정 전 기사제목)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9개 언론사 13개 기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1건의 기사는 삭제되거나 제목이 수정됐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정의연 보도에서 바로잡아야 할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판결을 받은 11건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보와 왜곡보도가 쏟아지고, 한 언론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에 가까운 사실을 ‘단독’이라고 내면 여기저기서 받아쓴 당시를 떠올려볼 때 수많은 어부지기 기사와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쓴 기사 모두 정정하거나 반론을 신거나 삭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언련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정의연 보도의 키워드를 뽑아 포털에서 검색했습니다. 받아쓴 기사들은 정정도 반론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중 받아쓴 기사가 없는 경우가 1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삭제와 정정보도를 주문한 서울경제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정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2020/5/21)입니다.

6) 임해중, 2020.07.07., 뉴스1, <중앙대 의혈언론인상에 류석우·박민지·사공성근·양길성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3987897>

4. 나가며

1심 판결 이후 익명으로 비판한 조선일보, 성찰 없는 언론

2023년 2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배석판사 신철민·박준범)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사건별 구분시 14개 혐의, 13개 혐의에 무죄 선고 횡령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활동가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2020년 동안 1억37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중 1,718여만 원만 윤 의원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치매 진단받은 김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 △허위·거짓으로 정부·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타냈다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 △안성 씬터를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안성 씬터를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했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당일부터 1주일간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다음날부터 1주일간 8개 신문지면(7)을 살펴보니, 조선일보가 13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는데요. 다음날 1면에 실린 <윤미향 1심서 벌금형…법조계 “납득 어려워”>(2023/2/11)에서 ‘법조계’와 ‘한 현직 판사’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1심 결과에 대해 익명 취재원을 이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비판하는 게 적절한 보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조선일보는 10개 의혹 첫 보도 중 4건을 첫 보도해 의혹 제기는 물론, 이후 정의연의 반론·해명에도 기존 문제제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똑같은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등 ‘의혹 아젠다 키퍼(Agenda Keeping)’에 매진했습니다. 해당 기사들의 ‘사실 함량 미달’은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행태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부분 언론이 매한가지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일주일간 신문·방송에서 나온 보도 및 사실 중 3년 전 정의연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사실(8)에서 “언론은 무분별한 받아쓰기로 일조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볼 일”이라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일보 또한 2020년 5월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이후 특히 안성 씬터 관련 의혹 제기에 가장 먼저 나선 언론으로서 자사의 정의연 보도에 대해 성찰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신문·방송 보도를 살펴봐도 언론의 반성은 없으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무죄 보도’를 검색했을 때 당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이나 성찰을 담은 기사는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7)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8) 한국일보, 2023.02.11., 「윤미향 1심 벌금형… ‘후원금 유용’ 깊이 반성하길」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014070003824?did=NA>

정의연에 대한 언론의 정의(定義)는?

정의연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언론의 정의(定義)가 잘못되었다는 점도 짚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대상인 10개 의혹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당시 언론의 문제제기 중 ‘정의연이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 지원에 적은 돈을 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할머니들 위해 모은 성금인데…정작 받은 건 106만원>(2020/5/9)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으며, 연합뉴스 <정의연, 기부금 18% 피해자 지원…“국제활동·소송지원 등에 써”>(2020/5/9)가 나오면서 많은 언론이 받아썼습니다.

정의연은 2020년 5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라며 “피해자 지원사업은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구호단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연 설명대로 정의연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호단체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범죄인정·공식사죄·법적 배상·진실규명·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원단체·구호단체가 아닌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언론은 정의연 활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1심 판결 이후 한국경제는 사실 <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인정…윤미향 의원직 내려놔>(2023/2/10)에서 윤 의원에 국회 의원 배지를 떼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연대가 어떤 단체인가. 일본군 위안부로 불우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을 돕자고 만든 시민단체다. (중략) 어떤 도덕·윤리 의식이길래 그런 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인가.” 언론은 왜 정의연의 솔한 해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정의연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정의연 보도 사태, 언론 스스로 돌아보자

윤 의원에 대한 2심 재판이 4월 26일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9월 초·중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심뿐 아니라 향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 주목도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5월 언론의 수많은 의혹 제기가 타당했는지 아닌지 다시 판단해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과 별도로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의연 오보사태’는 단순한 ‘검찰 발 받아쓰기 보도’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과의 결탁, 검찰권력과의 유착, 기자의 무지와 취사선택, 기능하지 못한 데스크, 저널리즘 본령에 대한 오해, 단독보도 남발, 무분별한 받아쓰기 등 한국 언론의 낡은 인식과 고질적 관행이 만든 사건입니다. 언론의 왜곡보도와 오보로 이용수 선생이 2020년 5월 우리 사회에 던진 문제 제기는 휘발되고,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쌓아 올린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퇴색시켰습니다. 사법부는 윤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정의연 보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성, 언론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주제발표

정의연 오보 사태의 배경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전 오사카총영사

1. '윤미향 오보 사태'의 배경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오보사태, 즉 ‘윤미향 오보사태’는 크게 두 개의 국면으로 나뉘어 전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도를 제1국면이라고 한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보도를 제2국면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실태에 관해서는 첫 발제자인 조선희 민연련 활동가가 잘 정리해 발표했으므로, 저는 보도의 특징과 그런 보도가 나온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국면의 보도는 위안부 운동 내부의 균열을 이용한 ‘정의연-윤미향 때리기’ 보도가 특징입니다. 즉,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의연을 비판하는 보도가 중심을 이뤘습니다. 남의 칼을 활용해 상대를 베는,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 식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국면에서는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흘리는 정보를 확인이나 검증 없이 받아서 공격하는, 전형적인 받아쓰기 기사가 주가 됐습니다. 물론 제1국면과 제2국면을 꿰뚫는 공통점은, 윤미향과 정의연을 목표로 삼아 그들을 악마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많은 미디어가 윤미향과 정의연을 악마처럼 만드는 보도를 쏟아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라는 미디어의 격언처럼, 정의로움과 깨끗함을 생명으로 삼는 비정부단체인 정의연이 부패했다고 하니까 각 미디어가 취재와 보도에 열을 올린 면이 분명

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단체와 사람을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낸 데는 그런 특이성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배경이 오래전부터 정의연(정대협)의 후신이 보수 기득권 세력의 눈엣가시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봅니다. 거칠게 말하면, 보수세력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또는 삼국동맹을 통해 북한, 중국을 제압하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실현하는 데 정의연이 주도하는 일본군‘위안부’ 운동,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해 역사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5월 윤씨 사건이 나기 몇 년 전부터 지만원, 주옥순, 이상진씨 등 보수 우익 ‘전사’들이 윤씨의 남편을 간첩으로, 정대협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하는 단체로 매도하는 선동 작업을 해온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관료 출신 인사들도 이런 사실을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일본 쪽 인사에게 흘리며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7년에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작업의 책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놀랐던 대목이 바로 일본 정부가 한국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한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각기 독립 주권국가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인 두 나라 사이에 도저히 오갈 수 없는 수준의 망언입니다. 바로 밑의 칸에 들어 있는 얘기가 당시 비공개 부분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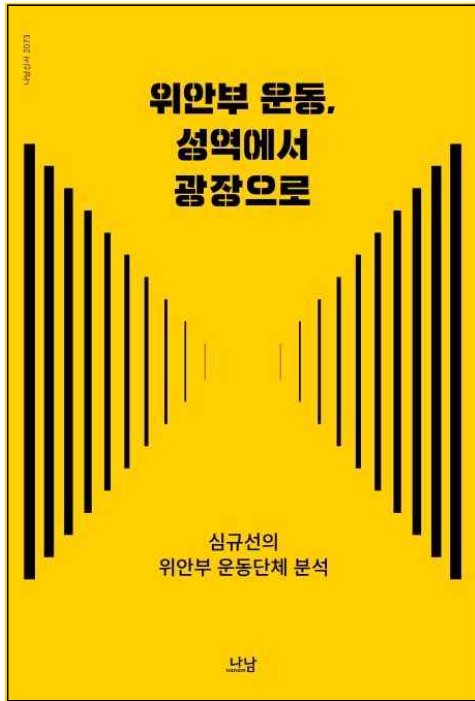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의 착실한 실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공의 안녕·위엄의 유지하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 검토 결과 보고서> 중)

여기서 ‘관련 단체’는 정대협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한·일 정부 모두 정대협을 두 나라의 협력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인식하고 대응을 협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연(정대협)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일부 극우 인사들의 공개적인 선전활동과 달리, 전통 미디어들은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전까지는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세력과 정세 인식을 공유하는 보수성향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하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인 쟁점으로 끌어올리며 범국민적 지지와 지원을 받는 정대협과 활동가들을 공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마침 위안부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윤씨를 비판하고 나서자, 보수 미디어들은 드디어 때를 만났다는 듯이 그동안 가슴 속 깊이 감추고 있던 화력을 쏟아내며 정의연과 윤씨에 대해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연 보도 사태에 깔린 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나남, 심규선 지음, 2021년 2월)는 그런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저자인 심씨는 <동아일보>의 도쿄 특파원,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으로,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3자 대위변제’를 실시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씨는, 이 책에서 ‘위안부 운동’이 ‘위안부 단체 운동’으로,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단체 중심주의’로 변질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체가 되어야 할 피해자는 변두리로 밀려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주역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귀담아들을 대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피해자 단체의 무력화, 해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국제 인권운동 과정에서 확립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마치 무슨 정파의 이념이라도 되는 양 굳이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단체 중심주의’라고 비틀어 쓰며,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사이를 이간질하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무엇인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제3자 대위변제의 강제동원 해결방안을 비판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중심 접근’은 “피해자 중심이냐, 피해자 지원단체 중심이냐” 하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방안 속에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 내용이 담겼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송 위원장 성명의 일부입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도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일반논평 제3호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하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3월 8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관련 성명 중)

심씨로 대표되는 보수 기득권 미디어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간질하는 개념으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것은 무지이거나 악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보수 미디어뿐 아니라, 진보 성향 미디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의연과 윤미향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진보 성향의 미디어가 진보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보수 미디어 못지않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은 이 사건뿐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도 그랬습니다.

보수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진보권에 적대적인 프레임을 짰 뒤 진보권을 공격해왔다면, 진보 성향의 미디어는 자신이 편향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진보권 비판에 나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종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동원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대다수 미디어가 보수언론의 공격에 결과적으로 가담하는 큰 흐름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미디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미디어가 보도 과정에서 꼼꼼하게 거쳐야 할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착한 아이’ 노릇에만 힘을 쏟다 보니 보수 미디어가 짜놓은 프레임을 강화하는 들러리로 전략하게 되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윤미향 보도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오보 판명 뒤 언론의 대응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문병찬, 신철민 박준범 판사)는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에서 서울서부지검 최지석 검사가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지석 검사는 윤씨에 대해 8가지 혐의(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에위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준사기)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중 일부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된 12개 혐의까지 포함하면, 언론과 수사기관이 제기한 20개 혐의 중 단 1개, 그것도 1억원의 횡령 혐의 중 10분 2도 안 되는 1700만원만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1700만원도 워낙 시간이 오래돼 영수증을 찾지 못해 소명하지 못한 액수라고 합니다. 사회운동가 전지윤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과 경찰, 언론이 뒤집어쓴 20개 혐의 중 19.8개가 재판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것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윤씨는 검찰이 횡령으로 기소한 1억원보다 더 많은 개인 돈을 정대협에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윤씨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디어와 수사기관이 윤씨를, 운동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인으로 매도한 것과 180도 다른 평가입니다.

1심 재판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윤씨와 정의연의 승리, 검경의 패배, 미디어의 오보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지만, 1심 판결문을 보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미디어는 극히 일부 액수에 대한 유죄를 제목으로 뽑고 대부분 무죄가 난 것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뒤 오보에는 철저하게 눈을 감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원로 언론단체가 낸 성명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윤씨 보도 사건과 관련한 우리나라 미디어의 문제가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원로 언론인들이 4월 7일, 제67회 신문의날을 계기로 낸 성명에서 윤미향 보도와 오보 뒤의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나라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의 대표 사례로 거론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는 우리 언론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검찰 발 받아쓰기와 반성하지 않는 오만입니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신문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흘려주는 정보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받아썼습니다. 인격 살해나 다름없는 보도로 평생 일본 ‘성노예 할머니’를 위해 헌신해온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윤 의원은 사실상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쩌면 받아쓰기 악습으로 ‘마녀사냥’ 식 보도를 되풀이해 온 한국 언론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과 다른 이런 보도에 대해 인권을 중시한다는 진보 언론을 포함해 단 하나의 신문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 같은 해외의 권위 있는 언론 같으면 달랠을 겁니다. 오보를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검증 보도와 더불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했을 겁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2023년 4월 7일 발표, 제67회 신문의날 성명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중)

3. 우리 사회에 남긴 문제

1심 판결 결과가 보여주듯이, 명백한 오보를 한 미디어는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 오보의 책임자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례로 미국 <뉴욕타임스>는 2002년에 벌어진 제이슨 블레이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해 그가 기사를 표절하고 날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윤리기준과 조직, 업무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이슨 블레이어는 물론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자세이고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정의연과 윤씨와 관련해 수많은 오보를 쏟아낸 미디어 중에서 아직 정의연과 윤씨 오보 사건을 반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창간 때 ‘또 하나의 미디어’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도언론의 일탈을 감시하겠다고 자임했던 <한겨레>조차 이 오보 사건에 대해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다만, <한겨레>는 5월 15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1면에 낸 알림에서 간접적으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겨레가 내놓은 법조 보도 반성 부분입니다.

“2) 법조 보도 달라집니다

한국 언론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과잉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때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한겨레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 단계의 보도를 줄이고 법원 재판 중심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잡한 공방이 오가는 공판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다양한 기사 쓰기와 긴 호흡으로 재판의 맥락을 보여주는 고정란도 선보입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담당자들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담해서 취재하는 제도를 실행합니다. 검찰 수사 보도에서도 독자적 검증을 강화하고 반론을 충실히 반영해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 보도 시행세칙’을 확고한 보도 규범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재 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조 출입뿐 아니라 기자 모두가 담당 분야에서 벌어지는 법적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내부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정보 폐쇄적인 사법 시스템의 오남용, 정치의 사법화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내부 다짐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에게 법조 기사 모니터링을 맡겨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창간 35주년, 5월 15일 자 1면의 ‘35살 한겨레가 다시 됩니다’ 알림 중)

저는 <한겨레>가 ‘검찰 보도’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윤미향 사건 보도’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증한 결과로써 이런 반성과 다짐을 내놨다면 훨씬 의미가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겨레>의 다짐은,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워낙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터이기에 이런 다짐조차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겨레>가 이런 약속을 잘 지켜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가 다른 미디어까지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었질러진 물이 돼버린 정의연 오보사태의 피해는 구제받기 난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오보로 정의연과 윤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단지 명예뿐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가장 큰 자원으로 하는 위안부 운동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언론자유를 앞세운 언론계의 이기주의 자세와 당시 야당의 가세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 허위보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언론계가 스스로 이런 작업을 추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민사회가 분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연과 윤씨에게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보도사태의 시발점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정의연 쪽에 매우 아픈 대목입니다. 위안부 운동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진 주된 원인이 운동세력 안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특정인을 국회로 진출시킨 선부른 정치세력화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운동 세력의 대표가 정치권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운동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보여줬습니다.

실사 운동세력 내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사회운동의 대표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위안부 운동만을 보면, 윤씨가 정의연의 대표로 있을 때보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지지기반이 더욱 좁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위안부 운동이 한 정파와 연계된 운동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은 오보사태로 인한 운동의 축소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토론

정의연 언론보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

2020년 5월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보수성향 언론의 보도 문제는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의혹 중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선희 민언련 활동가가 발제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당시 언론보도들 이후 왜 이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윤미향 vs 이용수 구도는 필연이었나?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씨가 문제제기하면서 사태가 시작됐고 당시 보수언론이 윤 의원(당선자 신분)과 정의연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비난하던 것과 달리 일부 언론에서는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보도했습니다. 사태 초반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20년 5월 8일 <이용수 할머니는 왜 ‘30년 동행’ 수요집회를 비판했을까>란 기사에서 이용수 씨 기자회견의 취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조 활동가가 지적해 준 것처럼 다수 매체가 5월 7일 이 씨의 기자회견을 왜곡했지만 한겨레는 왜곡보다는 이 씨 발언 취지를 해설하는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한겨레는 이후 5월 11일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 비판에 “기부금 절반 국외 홍보 등에 써”>, <정의연 “일반 기부금 41% 피해자 지원…일부 회계처리 미흡 사과”> 등 정의연 반론을 중심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갔고 같은 날 사설 <윤미향 논란’ 빌미로 ‘위안부 인권 운동’ 흔들지 말아야>, 5월 13일 사설 <수요시위, ‘초심’ 기억하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등 당시 벌어지는 논란으로 일본군‘위안부’ 운동 전체를 폄하하는 일각의 분위기를 경계했습니다. 5월 12일 <정의연 해명에도 회계 오류…국세청 ‘고의성은 없다’ 판단> 등의 보도에선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제3기관 판단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겨레 보도는 실제적 진실을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달리 조심스럽게 의혹과 반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정쟁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씨의 문제제기와 이후 공방,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공격한 윤미향과 뉴스공장

그러나 이 사안이 마치 윤 의원은 진보진영, 이 씨는 보수진영의 진영 대립구도로 변질된 데는 윤 의원의 근거 없는 이 씨에 대한 비난, 이런 주장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한 김어준 씨의 방송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윤 의원은 이 씨의 기자회견 다음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 시민당 공천에서 탈락한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를 만난 뒤 이 씨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치권에서 윤 의원이 공천을 받고 최 대표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피해 당사자인 이 씨를 활용해 윤 의원을 공격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이 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스피커 공격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그동안 정의연과 전신인 정대협을 공격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정대협이 피해자와 연대해 인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세뇌시켜 조종한다는 식의 발언입니다. 또 고령인 피해자들이 치매 등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일본 우익 주장처럼 이 씨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친민주당 성향 중 큰 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른바 ‘최 대표 배후설’을 주장하며 5월 7일 이 씨의 기자회견문이 “할머니의 문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도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그것도 사실관계와 무관한 스피커 공격은 그동안 정의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대중에게 커다란 분기점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씨는 5월 28일 CBS 라디오에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라며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최 대표 배후설’을 부정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할머니의 문장이 아니다’라는 음모론에도 이 씨는 “(회견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이라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6월 1일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장에 “김씨가 방송으로 얻고자 한 목적은 연세가 92세인 이씨가 ‘노망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공격한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윤 의원과 대표적 정파언론인 ‘뉴스공장’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본군‘위안부’ 운동이나 정의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수 성향 언론의 보도를 ‘오보사태’라고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한겨레 등을 비난하는 주장은 진영논리에 입각해 속 시원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태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봤을 많은 시민 입장에서는 윤 의원과 뉴스공장의 피해자 공격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비유했고, 경향신문 인터뷰에선 자신에 대한 공격을 곧 “위안부 운동 도덕성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해나 오류에 대해 차분히 해명하는 태도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자신을 곧 운동 전체로 규정하는 건 부적절한 대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인터뷰에선 “제가 국회를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 반응은 ‘잘했네, 함께 우리 문제 해결하면 되겠네’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잘했네” 한마디를 했을 뿐 국회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회계 오류 관련 사실관계보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간 공방은 더 선명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다소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정의연을 이끌어 온 윤 의원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시민단체와 피해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때 정의연과 진보성향 언론매체만이라도 이 사태의 본질이 ‘윤미향+정의연 VS 이용수’의 갈등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일부 오류와 방향성을 바로 잡아 더 발전적인 시민운동의 계기로 삼았다면 쉽게 진영대립으로 왜곡·축소되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뉴스공장’ 등의 의도와 달리 보수언론에겐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필요할 때는 피해자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편견을 확인해 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과 민언련 등이 오보사태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고, 상당수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제됐으며 경·검에서도 윤 의원 등이 대부분 무혐의·불기소처리 됐음에도 정의연의 이미지가 회복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만의 무리한 헐뜯기가 아닌 보수언론과 뉴스공장이라는 진보매체의 대립구도가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이나 대중은 양 당사자의 공방이 벌어질 때 곧바로 실제적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뿐 아니라 말하는 태도 등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당시 쟁점과 무관하게 정의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들 운동의 정당성이나 역사를 가르치는 태도나 질문을 막으며 화내는 모습, 윤 의원이 이 씨를 찾아가 화해의 제스처를 억지로 미디어에 노출하려던 모습 등은 주장의 신뢰감이나 단체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수언론이 각성한다 하더라도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수언론의 커다란 잘못과 함께 윤 의원과 정의연의 작은 잘못과 미숙함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언론의 성찰과 구분되는 윤 의원과 정의연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론

정의연 오보사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미친 영향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어떤 사태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고려해 사태를 명명하기 마련이다. 원인은 외부/내부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외인’의 작용으로 인해 오래 봉합됐던 ‘내인’이 함께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내인’으로 터진 갈등이 ‘외인’을 끌어들이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지금 이 사태를 뭐라 명명할 수 있을까?

“이용만 당했다” :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가

사건사의 시각으로 2020년 5-6월의 사태를 보자면, 원인은 지난 5월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다. 피해생존자의 고통이 배인 절박한 말과 인권운동가의 지난 운동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 뒤섞여 토해졌던 기자회견이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30년 동안 담보 상태인 현실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목소리를 냈다. 이용수의 말은 윤미향 전 대표와 정의연을 향하기도 했지만, 또한 말잔치 외에 실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 역사부정론에 입각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아베 정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파편화된 목소리 막바지에 “돈은 왜 마음대로 할머니들한테 안 쓰고 저거 마음대로 써.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가 섞여 나오면서, 대다수 언론은 약 한 달 동안 연일 ‘윤미향 사태’ 또는 ‘정의연 사태’로 명명된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 명명은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대표 활동가(윤미향)와 단체(정의기억연대)에서 사태의 원인을 찾고, ‘현미경 보도’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바라보게 한다. 5월 25일 이용수의 두 번째 기자회견은 그런 보도들이 자기 확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대다수 언론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습니다”란 말을 듣고 “이용만 당했다”고 헤드라인으로 뽑아내면서 그야말로 적극 ‘이용’했다. 증언 연구자라면,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렵게 결들을 헤쳐 나가고 있었을 거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정해진 프레임으로 그 말을 절취해 옥여

넣었다.

한편, 음모론의 문법으로 기계적으로 대입한 저널리스트와 유튜버들은 이 사태를 ‘이용수 사태’로 바라봤다. 이용수 할머니 대 윤미향·정의연 대립 프레임은 그렇게 진영화된 구도로 빨려 들어갔다. 대립적인 사태 명명은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정의연 모두에 대한 혐오·증오 발화의 폭발로 이어졌다. 윤미향·정의연에겐 피해생존자를 “앵벌이”시킨 파렴치범, 돈(보상)을 못 받게 해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권력만 쫓은 전체주의자, 반일=종북 낙인, 피해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억’을 의심해 일본 극우의 행태를 보인 친일파, 그리고 ‘매춘부’라는 혐오가 쏟아졌다. 급기야 이용수 할머니에게도 배후에 의해 조종당하면서 권력만 탐하는 물색없는 대구 사는 노인, 일본군 병사와 “영혼결혼식”을 한 친일 ‘매춘부’라는 혐오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진실이 없다. 양쪽 다 가짜 사실이 넘쳐나고 진실보다는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면서 같은 의견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안적 사실’을 진실이라고 우겨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가짜와 거짓을 계속 듣다보면 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잃고, 심지어 지어낸 이야기에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탈진실 부정과 혐오의 백래시 사태

‘탈진실’ 부정과 혐오의 기획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말 그대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양질적으로 압도적인 오보들이 쏟아졌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획의 출처, 더 나아가 기획을 실행한 거대한 힘이 단일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분명한 건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조차 부정·혐오로 공격했던, 특히 <반일 종족주의> 책 출판 직후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무대로 암약해왔던 뉴라이트들, 여기에 전직 외교안보 관료들의 의도와 기획들이 뒤섞이면서 이용수 기자회견을 ‘이용’해 윤미향과 정의연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그들 사이를 갈라치고 대립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세력은 이 사태를 ‘윤미향 사태’ 또는 ‘정의연 사태’로 명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영화된 반발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음모론적으로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이용수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 사태들을 보도하는 극우 가짜뉴스 매체들은 물론, 보수 일간지들의 프레임과 솔하게 양산된 기사에서도 이영훈 등이 쓴 책 <반일 종족주의>의 언어들, 그 논리와 방법이 재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대협은 그들의 공명심을 충족하기 위해, 그들의 직업적 일거리를 잇기 위해” “개인의 인생사 따윈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팽개치고” 위안부를 “민족의 성녀로” 앞세워 시위를 벌이면서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전체주의적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는 수준의 이해와 내용이 기사마다 넘실거렸다. 이런 기사들은 한국 보수 언론의 일본어 온라인판으로 거의 동시에 일본에 출고되었다. 이를 받아쓰는 <산케이> 등 일본 극우보수 언론은 이 사태를 윤미향,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 3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실 근거들로 삼아 보도했고, 한국 보수 언론은 이를 외신보도 인용 형식 또는 현지 특파원 칼럼 등의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부정과 혐오 표현이 포함된 기사를 마치 사실 보도인 것처럼 포장해 보도했다.

2020년 5월 11일 이영훈 등이 개최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 기자회견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 비판적인 전문가 코멘트나 기획 기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약 2주 후 5월 26일 이영훈과 류석춘 교수,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주최한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심포지엄을 보도한 기사들에선 기계적인 비판 코멘트조차 아예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쓰고 대변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언론이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그 과정에서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그 책의 주장이 부각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고, 기자들조차 그 주장에 동조하는 ‘상호 참조’ 현상이 벌어졌다.

5월 12일 수요일 전 날 ‘위안부’ 부정과 혐오를 일삼는 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가 평화의 비(‘소녀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그들이 내건 펼침막에는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이란 구호가 새겨져 있었다. 태극기와 일장기를 양손에 들고 친일이 곧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에서 “치욕스런 위안부 이력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 준 정대협과 여가부는 용서 못할 인권침해 집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한국 뉴라이트 부정론자들의 입에서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간악하게 이용해먹는 ‘복화술’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태는 ‘부정과 혐오의 백래시’ 사태로도 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사태의 외인론 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태는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전장’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역사부정과 여성혐오 사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가짜뉴스 및 악의적 오보는 사태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탈진실 시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부정과 여성혐오의 백래시 사태는 현재 수요시위 현장에서 잘 확인된다. 수요시위 현장을 뒤덮은 부정과 혐오 발화 행위들은 단지 사실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잔혹하게 바닥으로 팽개치고 있고 극에 달한 조롱과 헐박으로 수요시위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두려움과 수치심 등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피해자와 활동가 사이를 갈라 대립시키게 만들고 ‘위안부’ 운동을 파렴치한 것으로 몰아갔던 사태는 ‘램지어 사태’에서도 확인된 바 그 얼굴과 이름을 달리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탈진실 시대 미디어 공론장의 양분화된 진영의 한쪽에서, 심지어 (유사)학술장에서 부정과 혐오는 쉽게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공식 제도정치에서도 부정과 혐오를 동원하고 정책화하는 정치가 및 공무원(‘어공’)들이 많아지고 있고 서로 네트워크하고 있는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당분간 난망해 보인다. 이 백래시 사태에 반격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모색할 수 있을까?

* 이 토론문은 “30년 운동 폄훼하는 보수언론 부정·혐오에 맞설 힘을 키울 때다”(〈한겨레〉 2020.6.8.)와 “일본군 ‘위안부’ 보도, 언론이 진짜 원하는 건?(정준희의 해시태그 11회)”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글임.

토론

한국 언론은 어떤 민주주의를 희망하는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 언론학은 그동안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선거 보도를 통해 한국 언론들이 첨예하게 정파적이고 더 나아가 당파적으로 대결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계에서 이러한 언론의 정파성, 당파성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가 더 이상 주요한 연구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파성, 당파성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결과를 통한 언론제도와 보도개선 등의 학술적인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뻔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학자들 역시 언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매우 낮아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언론학에서 나타난 새로운 연구 경향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분석 대신,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의 증가입니다. 즉, 언론 보도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 의견들이 어떻게 각종 댓글과 SNS를 통해 나타나는지,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이제는 언론에 대한 의견과 인식을 직접 글과 영상, 이미지로 댓글 및 SNS에서 표현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학자들이 직접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언론 보도보다 언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시대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두려운 것은 시민들이 특정 이슈와 선거에서 보이는 태도 역시 정파적으로, 당파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라 그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거칠고 자극적입니다. 혐오와 증오 표현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 공론장의 적대적 대결 경향은 어느새 공중들의 의견 공론장에서도 일반화되어 있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 담론이 형성되는 언론 공론장과 여론 담론이 형성되는 여론 공론장의 이러한 ‘적대적’이고 ‘정쟁적’ 대결 구도는 한국의 사회적 공론장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롭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퇴락해 있어 숙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이상적 공론장의 구성이 거의 불가능한, 고장 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공론장과 고장 난 숙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기에 큰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이러한 타락한 공론장과 고장난 숙의 과정이 폭력적인 정치 체제를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정의연 보도처럼 언론의 보도가 폭력적인 이유는 이러한 폭력적인 보도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학에서는 폭력적인 정치 체제로 간주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와 전체주의적 정치는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특정 사회 조직과 단체, 그리고 이들의 이념과 가치를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며 이러한 적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결속과 권력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연에 대한 언론의 적대적 보도와 공중들의 혐오적 반응은 단순히 공론장의 타락과 숙의 과정의 불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즉,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치를 위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 ‘사건’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연을 회계 부정과 횡령을 일삼는 범죄 집단으로 보도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혐오하게 하며, 건설노조원 양희동 열사의 분신에 대한 잔인한 음모론으로 노조와 노동자를 혐오하는 시민들을 양산하며, 416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를 정치적 그리고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이태원 참사 등 이후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 행위를 혐오하게 하는 시민을 양산하는 언론보도 등은 언론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 바로 전체주의적 정치 체제의 구축과 우파-극우 독점 공론장의 조건을 차근차근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과 검찰 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연 보도와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 보도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검언 유착의 의혹들은 사법 기관과 언론이 사회, 정치, 노동 이슈들을 특정 이념과 가치를 넘어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우려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검찰 권력의 전사회적 확장이 언론과의 결합을 통해 체계화되고 공론장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사법 권력을 통한 공론장의 장악, 보수-우파 언론과 사법 권력과의 연합을 통한 공론장의 통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정치의 전조들입니다. 지금 현재, “87년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보수-우파 언론이 기존 정치와 사회 권력과의 연합과 연대하는 지점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우 전체주의적 전조가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다는 징후는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보수-우파 공론장의 시스템화는 2009년 미디어법지지연합(정부, 여당, 전경련, 대형신문사, 케이블방송협회)에 의한 종편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부터 가시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최진웅, 2012)⁹⁾. 이 미디어정치연합이 보수-우파 언론의 안정적 권력의 재생산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라면, 최근 국민의힘당이 조직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보수-우파 권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하여 보수-언론과의 연합을 시스템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면 감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직후에 관련 TF가 국민의힘당 내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TF 전후로 정의연과 건설노조에 대한 언론의 폭력적 보도로 시민들의 여론 공론장은 시민사회와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보수-우파 언론 권력의 재생산을 위한 미디어정치연합, 국민의힘당과 보수 우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연합, 그리고 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강제하기 위한 사법 권력은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보수-우파 권력 재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수-우파 공론장의 시스템화는 동시에 이에 비판적 언론에 대한 배제 과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TF를 만들고 느닷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우파 공론장이 정치와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노조를 적대시하며 이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켰다면, 이러한 가짜뉴스 정책은 보수-언론 공론장이 유일한 공론장으로 독점화하기 위한 정치연합 시스템의 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체주의는 정의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대와 혐오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기존의 주요 사회적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그러한 적대와 혐오 전략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2022년 발표된 한국 사회통합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우리 국민은 빈부격차와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 집단 간 가치관 차이를 사회 갈등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음”이라고 나옵니다(p. 72). 이러한 국민적 인식에 기초하여 보수-우파 미디어 정치 연합은 정의연, 민노총, 시민사회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

9) 최진웅(2012)은 <미디어 산업의 정치경제: 2009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아래 표와 같이 종편의 법제화는 언론과 자본 및 정치 권력간의 “정치연합”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연합	미디어법지지연합	행정부 입법부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전경련, 대형신문사(조선·중앙·동아), 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법반대연합	행정부 입법부 단체	- 야당 언론노조, 방송사(MBC), 신문사(경향, 한겨레)

회 갈등의 유발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의 기관별 신뢰도를 보면, 국회-검찰-법원-신문사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수-우파 정치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제도들은 가장 낮은 사회적 신뢰를 가진 곳들이지만 그들의 정치적 연합에 의해 그들보다 높은 사회적 신뢰를 보이고 있는 노동조합단체와 시민단체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양상입니다.

더군다나 이들보다 더 많은 신뢰를 보이는 TV방송사를 민영화하여 보수-우파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낮은 신뢰의 정치-언론 권력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저신뢰 권력 기관에 의해 혐오와 배제에 의한 권력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단순히 우려만이 아닌 것입니다. 낮은 신뢰의 정치-언론 시스템의 생존 전략은 그보다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과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작, 배제 그리고 장악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우파 언론의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보도 문제는 이제 단순히 언론 시민사회와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언론취재와 보도 방식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사회가 개혁되지 않는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이러한 보수-우파 정치 연합에 의한 공론장의 전체주의화가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의 정파성, 당파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저널리즘의 객관성, 공정성을 주장하는 규범적 비평, 그리고 이러한 체계 밖에서 보도(공판중심 보도, 독자 검증, 반론 반영 등)가 과연 민주주의 수호와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큼니다.

오늘날 민주적 언론은 과연 어떠한 언론을 의미하는가? 신냉전 구도에서 내적 냉전 체제의 강화를 통해 체제만의 안정을 추구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들의 사회를 시민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면서 혐오하게 만드는 언론과 정치 연합이 독점하는 공론장을 민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보수-우파 언론권력은 권력화되지 못한 진보-좌파 언론보다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의 재생산을 위한 영속화가 과거 어떤 정권보다 체계적인 권력 내부의 결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향후 시민사회와 언론들의 실천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되길 바랍니다.

토론

정의연 오보·왜곡보도, 피해구제는 가능했나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정의연 오보사태’라는 명명

2020년 5월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명명할 수 없어 한동안 고통을 겪었다. 민언련에서 당시 일련의 사건을 ‘정의연 오보사태’로 명명해주어 많은 것이 정리되었고 기쁜 마음마저 들었다. 사건의 명명은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가해자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정의연 오보사태’에서 오보의 피해자를 ‘정의연’이라 한다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였을까? 오보사태를 양산한 무수한 당시 언론들이었을까? 30년 넘게 함께 해 온 활동가가 해결되지 못한 운동을 그만두고 떠난다고 생각하신 피해자의 서운함 토로, 그 얘기 가운데 맥락 없이 단발적으로 터져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언론은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부풀렸다.

조선일보를 위시로 한 다수 언론은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앞다투어 생산했다. 피해자가 먼저 운동단체에 불만을 토로한 기회를 틈타, 정의연 ‘마녀사냥’에 나선 세력들은 역사문제를 ‘봉합’하려는 데 방해가 되는 운동단체를 흠집 내려 각자의 힘을 보탤다. 오태규 님이 지적했듯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정의연이 주도하는 일본군‘위안부’운동, 일본에 역사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가장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등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파상공세로 운동은 꺾히었고 정의연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3년 전 광기 어린 언론의 행태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다.

온갖 쟁점에 대해 온갖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전화로 하루 종일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났고 홈페이지는 대부분 기자였을 접속자들의 폭주로 몇 차례나 다운되었다. 사무실 앞과 주차장까지 모든 출입구에 진을 친 기자들 때문에 야근 식사를 매일 사무실로 시켜야 했고, 정의연 활동가들이 뭘 먹었는지 궁금한 기자들은 배달하는 분을 취조했다. 사무실 안으로 카메라를 쏘아넣어 촬영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영상카메라를 내미는 통에 출입구에 커튼과 CCTV를 달았다.

KBS <시사직격> 49회 방송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생산된 정의연 관련 기사만 1만 2천 건이다. 매일 쏟아지는 기사에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 서울시 등 셀 수 없이 많은 정부기관이 정의연에 해명 입증 자료를 요청했다. 정의연 활동가들은 언론이 매일 새롭게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모르는 예전 자료를 찾아가며 입장문을 썼다.

언론이 우리 말을 어떻게 편취하고 이용할지 몰라 무서웠고,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해 지난 운동 성과가 무화되고 정당성이 훼손될까 두려웠다. ‘윤미향’ 묻을까봐 가까이 오지 않던 많은 사람들, ‘만약 언론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며 정의연을 의심하던 사람들, 우리가 언론 대응을 잘하지 못해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활동가들은 다시 그때의 트라우마를 겪는다. “혹시 내가 그때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자책한다.

클릭을 위해 영혼도 바치는 언론

언론은 공정하고 진실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쓸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직접 겪은 언론은 그렇지 않았다. 기사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든 하는, 언론 보도 준칙을 잇은 하이에나 떼 같았다. 취재를 했거나 무슨 단서가 있어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되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었다.

‘회계 부정’ 기사가 대표적이다. 국세청 공시 서식은 비영리단체에서 적용해 왔던 회계기준 및 내부 결산 방법과 다르다. 정의연은 사이트에 공시자료를 입력할 때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별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몇 년간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공시에만 기재하지 않은 것뿐 결산자료에는 누락 없이 계속 반영돼 있었으므로, 회계상 누락은 아님을 정의연은 일관되게 해명해왔다. 이후 모두 공시에 입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2019년부터는 명시한 것인데도 언론은 이를 두고 ‘정의연 장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사라졌다, 정의연이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공시 양식이 배분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맞춰져 있어 운동 목적의 시민단체에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사업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는 행사에 명시적인 수혜자 수를 기입할 수 없으니 통칭 ‘9999’로 표기하는 관행은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던 바다.

국세청 양식에 따라 지출 목적으로 모금활동비에 쓰인 돈을 한꺼번에 적고 대표지급처를 기재한 것을 두고 ‘정의연이 맥줏집에서 하루 3,300만 원 수상한 술값을 썼다’는 기사가 났다. 한국경제 기사는 공시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채로, 정의연 활동가와 했던 긴 대화의 일부를 취사선택해 국세청 공시를 왜곡보도했다. 3,30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도 기사의 논조를 바꾸지 않았다. 연말에는 자사 기자가 특종이라도 한 듯 상을 수여하는 ‘경제신문’이라니, 개탄스러웠다.

BTS 팬클럽 아미로부터 받은 패딩을 할머니들께 전달하지 않았다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의연이 당일 오후엔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정의연의 반론을 신지 않고 급히 먼저 기사를 냈다 한다. 당시 정의연 사무실은 기자들과 항의하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어서 제대로 연락이 닿지 못한 거였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못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다. 단지 속보경쟁 단독경쟁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지. 이런 1차 기사가 나가면 수많은 언론들의 베껴 쓰기 기사가 쏟아졌다.

‘위안부’문제가 무엇인지, 정대협은 무엇이고 정의연은 무엇인지 모르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많았다. 정의연은 운동단체라는 반복된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을 할머니 돕는 구호단체로만 규정하며 돈을 쌓아두고도 기부금의 극히 일부만을 할머니들께 드렸다고 분노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정의연이 마치 큰 권력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대하여 의도적으로 정의연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깊은 반감을 표출하는 기사도 많았다.

있지 않은 걸 쓰는 것도 가짜뉴스지만 ‘정의연 악마화’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에 맞는 자료들만을 근거로 삼아, 사실관계도 확인됐고 엄연히 반론이 있는 것들까지 의도적으로 빼는 것도 가짜뉴스다. 특히 조선일보 등은 같은 의혹을 반복 제기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으니 정의연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 ‘의혹 덧씌우기,’ 해명된 ‘의혹’ 다시 제기하기,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허공에 메아리였다.

일사불란하게 짜여진 각본

무차별 왜곡보도 등 언론이 먼저 ‘마녀사냥’으로 국민 여론을 형성한다. 분노한 일부 보수 유령 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진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언론에 공포한다. 빠르게 기소가 진행되고, 사무실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언론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이어진다. 화가 난 극우 단체들은 문제시된 단체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한다. 일사불란하게 짜인 각본의 수순으로 모두 정의연이 겪었던 일이다.

5월 26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정식 발족한다. 위원장은 ‘50억’으로 유명해진 곽상도다. 당시 연일 이어진 정의연 뉴스에 5월 21일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는 “‘언론’이라고 정말 불러도 되나요?”, “‘언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해’처럼 느껴진다”, “린치”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5월 20일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 5월 21일 피해자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와 잦은 연락,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 과도한 취재 경쟁, 하

루 종일 쏟아지는 전화 벨소리, 초인종 소리, 컴퓨터 앞에 진을 치고 카메라 세례를 퍼붓는 기자들... 불안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으며 고통을 호소하셨던 쉼터 소장님은 6월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보도와 괴롭힘이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6월 8일 방송인 김어준 씨는 조선일보 등의 정의연 취재 행태를 두고 “보도살인”이라 규정했다.

소장님의 죽음 이후에도 패륜적 언론 공작은 끝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양아들과 며느리의 일방적 말을 근거로 고인을 모욕했고, 인권운동가의 삶을 실천해온 길원옥 할머니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하며 ‘길 할머니 치매 이용’해 정의연이 모금했다는 기사를 써댔다. 정의연에서 입장을 내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조선희 님이 지적했듯 조선일보는 ‘반론 해명에도 기존 문제제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반복되는 해명에도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아젠다 키팅’에 매진했다. 근거나 반론과 관계없이 동일한 쟁점을 계속 주장한 것이다. 이쯤 되면 언론이라 부를 수 없을 지경이 아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다

운동에 함께 해온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다. 정의연의 도덕성은 떨어지고 운동의 진정성까지 의심 당했다.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도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맞서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 제기 등 대응을 준비했다.

매일 이슈에 대한 입장이 나갔고 대응하는데도 벅차서 우리에게 대한 모든 기사를 검색할 시간이 부족했다. 언론은 클릭 장사가 끝났다 싶으면 기사를 내리기도 해서 활동가들은 악의적 기사를 보면 PDF 파일로 바로 저장해두는 습관이 생겼다. 이는 추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 제목을 수정한 조선일보에 맞서 기사초판 제목을 증거할 자료로 쓰이기도 했다. 너무 많은 기사를 다 고소할 수는 없어 대표적으로 악의적인 보도, 특히 조선일보 등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보도를 먼저 추렸다. 기사는 많았지만 윤미향 의원 개인이 대응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정의연이 직접 언급된 기사 중 선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1, 2차에 걸쳐 제소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20. 6. 15. 1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 신동아 7개 언론사 9개 기사 제소

2020. 6. 15.

[언론 조정 신청서 제출] 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언론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함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을 스스로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언론 보도의 피해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각종 허위보도들이 쏟아지는 분위기에 편승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한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허위보도 및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요청을 드렸음에도 해당 언론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 언론이 보다 발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선 조선일보사 등 7개의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 명예훼손 기사에 관해서는 모두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2020. 6. 25. 2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데일리, 서울경제 4개 언론사 5개 기사 제소

2020. 6. 25

[2차 언론 조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정의기억연대는 일부 언론의 지속적인 허위·왜곡보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감 있고 한층 성숙된 언론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데일리, 서울경제 등 총 4개 언론사, 5개 기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언론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가짜뉴스' 양산, 짜깁기를 통한 교묘한 사실왜곡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지대한 바, 정의연의 이번 언론조정 신청이 표현의 자유 제고는 물론, 한국 언론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 2020. 8. 3. 정의연 입장문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발표: 제소한 13개 기사 중(1차 처음에 9개 기사였다가 조선일보 기사 1건 삭제로 1차 총 8개 기사)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 ▲조정성립 6건 ▲강제조정 5건 ▲조정불성립 2건

① 조정 성립 6건

날짜	시간	언론명	기사	타이틀	결과
2020-05-21	2020.05.21 14:15:45 수정 2020.05.21 14:15:45	서울경제	허진	[단독]정의연이반환했다는국고보조금, 장부보다적은3,000만원어디로?	조정성립 (기사삭제, 정정보도)
2020-06-01	2020.06.01 17:01:15 수정 2020.06.01 17:01:15	서울경제	허진	[단독]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 ...정의연 '제2 옥tober리스트' 의혹	조정성립(정정보도, 대표지급처반론보도)

2020-06-09	2020.06.09 17:44	국민일보	권혜숙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조정성립(기사삭제)
2020-06-16	2020.06.16 15:00 수정 2020.06.16 15:32	조선일보	김형원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조정성립(정정보도)
2020-06-16	2020-06-16 17:29 수정 2020.06.18 09:22	조선비즈	김민우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조정성립(정정보도)
2020-06-19	2020.06.19 18:55 수정 2020.06.19 19:11	중앙일보	박현주	정의연감사편지쓰날...후원자25명, 기부금반환소송	조정성립(제목수정, 정정보도)

② 강제조정 5건

날짜	시간	언론명	기자	타이틀	결과
2020-05-11	2020.05.11 17:33 수정2020.05.12 09:42 지면A2	한국경제	양길성김남영김보라	[단독] 하룻밤3300만원사용...정의연의수상한'술값'	강제조정(정정보도, 대표지급처분론보도)
2020-05-19	2020.05.19 18:30 수정2020.05.19 23:35	중앙일보	김준희	[단독]"'아미'가기부한패딩...이용수 곁에남할머니못받았다"	강제조정(정정보도)
2020-05-19	2020.05.19 22:21	한국일보	박경우	'아미'가할머니숫자맞춰기부한패딩... 이용수할머니못받아	강제조정(제목수정)
2020-06-16	2020-06-16 17:42 수정2020-06-16 17:53	뉴데일리	이도영	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정의연 '셀프 심사' 거쳐 10억 받았다	강제조정(피신청인 불출석, 유선통화 기사삭제 정정보도)
2020-06-10	2020.06.10 05:00	중앙일보	한영익	"정의연은운동권물주"...재벌뺨치는 그들만의일감몰아주기	강제조정(반론보도)

③ 조정 불성립 2건

날짜	시간	언론명	기자	타이틀	결과
2020-05-11	2020.05.11 12:02 수정 2020.05.11 21:42	조선일보	원우식	정의연"이용수할머니계사과... 기부금사용내역은공개못해"	조정불성립
2020-05-27	2020-05-27 15:00:01	신동아	나연준	위안부비극을돈과권력으로맞바꾼정의연파탄記	조정불성립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된 2개 기사는 민사재판으로 가기로 했다. 몇 가지 기사를 더 추가하여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 및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2020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해당 민사재판은 윤미향 의원의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현재 추정되어 있다.

정정보도가 돼도 진실규명은 요원

셀프 심사, 회계에 대한 허위보도 등은 실제 그런 사실이 없었으므로 분명했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아미 패딩 전달 건’은 정의연에서 전달 사진과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서 입증 가능했지만, 만약 안 그랬다면 어땠을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겪어보니 누군가를 인터뷰한 기사는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조선희 님이 지적했듯 중앙일보가 과상도 당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소스로 윤 의원이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것’이라 보도한 기사를 보면 ‘기부금 유용과 빚 없이 아파트를 구매한 것 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기사 제목으로 짐작하게 할 뿐이다. 언론사가 ‘우리는 인터뷰이의 의견을 실어준 것이다, 제보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면 정정 및 반론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논평이나 사설, 칼럼 등에서 의견을 피력하며 근거로 삼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글의 성격 자체가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의연 오보사태’를 보면 단독, 속보 경쟁을 위해 불충분한 1~2명의 취재원 수, 부실한 취재 내용, 심지어는 한 명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팩트가 맞는지 여러 각도로 검증하는 취재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2019년 당시 정의연 소식지 발간을 준비하며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장 싼 곳을 선정했는데, 이 3백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두고 중앙일보는 ‘일감 몰아주기’라 표현했다.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재벌들이 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원래 기사가 오보로 판명 나 정정되고 반론이 실리고 혹은 기사 삭제가 되어도 원 보도를 받아쓰기만 수많은 기사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피해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기사들을 찾아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정의연도 3차, 4차로 추가 대응하고자 했으나 쏟아지는 일들에 역력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다. 아직도 인터넷에 여전히 정의연에 대한 오보들을 보면 그때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다 대처하고 모두 처벌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정의연은 포털 게시 중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사가 정정되었음에도 그대로 실려 있으니 삭제해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다. 수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사이트들은 끝까지 글을 내리지 않았다. 2020년 8월 14일 청계광장에서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행사를 개최할 때 당시의 정정보도들을 ‘FAKE NEWS’라는 전시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내용을 전했다.

정정보도는 1면 머리기사로 나오던 최초 보도와 달리 아주 작은 사이즈로 1면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실린다. 최초 보도와 동일한 곳에 비슷한 크기로 선명하게 실려야 하는 게 아닐까. <알려드립니다!> 라는 정보성 제목도 알맞지 않다. <사과합니다> 또는 <오보를 정정합니다> 정도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오보를 낸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정정보도문에도 어떤 경위로 오보성 기사를 쓰게 되었는지, 이 보도를 통해 누가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죄송하다, 사과한다는 식의 문구는 없었

다. 그냥 <알려드립니다>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쓰라고 결정 난 문구들을 건조한 문체로, 작은 사이즈로 실을 뿐이다. 이걸 위해 그 노력과 수고를 감당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가해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일반 국민들은 여러 형태로 책임이란 것을 지는 데 반해, 언론은 보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 오보,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최근 제기되었다가 사라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도에서 피해구제란 불가능하다. 단 한 건의 기사만으로도 사회적 정치적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데, 도대체 몇 만 건이 넘는 오보 러시에 피해를 입은 정의연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는 것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다

가정과 공공장소, 식당 등지에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혹은 며칠을 같은 화면을 반복해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을 통해 마치 뉴스에 나오는 문제제기가 모두 사실인 듯 받아들여기도 한다. 영상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 잘못된 방송은 폐해가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총 13개의 방송 클립을 제소했고 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 2020. 8. 27. 5개 기사 제소
- 2020. 9. 9. 8개 기사 제소 총 13개
- 2020. 12. 28. 3건에 대해 권고 결정

5월 12일 자 TV조선 "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 의혹..."성금 세부내역 공개 어렵다" 보도

- 국세청의 의무공시 제도, 관련 자료작성 기준 및 실제 운영 현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의혹이 제기된 특정 사례만 전달해 기부금 지출 내역 등 특정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에 의도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월 23일 자 TV조선 "정의연, 초등생기업·위안부 할머니 기부금도 '공시누락' 논란" 보도

- 기부금 영수증의 의무발급 필요성 등 관련 제도의 실제 운영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기부 당시 영수증 미발급 사실만을 전달해, 해당 단체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2일 자 채널A "정의연, 수상한 3천만 원...인쇄소에서 인터넷 사업?"

- 정의연이 기부금 지출 내역 등 회계처리에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검찰은 회계부정, 기부금 유용, 국고보조금 중복 지급 등 언론이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언론은 성찰하지 않았다. 2023년 2월 10일 기부금품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의연 활동가는 전부 무죄, 윤미향 국회의원은 7개 무죄, 1개에 벌금 선고를 받았다. 언론의 성찰은 또한 없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고 보도한 언론도 몇 되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보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언론보도를 믿은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 믿고 있을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 기사가 나오지,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말할 것이다. 2023년 4월 말 2심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직 오보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연대를 통한 책임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 마르틴 니컬러 목사의 글은 다르게 다가온다.

*그들(나치)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행히 정의연은 2020년의 ‘정의연 오보사태’를 계기로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얻었다. 활동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꾸리고 조직을 재편했다. 최근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5월 23일 조선일보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힘써 온 단체를 공격하며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 전 약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국민의힘은 즉시 비난 논평을 냈다. 곧 보수 유명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수순으로 갈지 모른다. 정의연은 부당한 공격에 결코 침묵하지 않고 더 굳건히 연대단체들 곁에 설 것이다. 한차례 ‘정의연 학습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언론이 받아쓰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20년의 포화 가운데서도 정의연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이 제기한 ‘회계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혹여 정의연이 망할까 걱정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탠 후원회원들 덕이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다. 여성인권 실현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아직 정의연의 책임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토론

시민단체·노조 공격, 제2의 정의연 사태가 되고 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2021.9~)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례에 걸쳐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진행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사회투자기금, 태양광 지원, 사회주택 사업 등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를 ‘다단계조직’에 비유
- “서울시 공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로 전락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
-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중개소’라는 표현을 사용, 민간과 행정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이해 부족을 드러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를 포함한 비영리영역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운동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도록 유인하고 있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밝힌 ‘1조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다수의 언론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서울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 서울시는 일부 보수언론에 자신들의 주장을 보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반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검증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광고를 중단시킴.→ 이후 동일한 패턴으로 비영리영역에 대한 비난이 지속 |
|--|

2.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왜곡 및 확산

-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른바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단체에 대해 왜곡과 폄훼로 일관하며 악의적 인식을 확산. 이는 오랜 기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며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낯은 인식과 적대적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남. 문건을 통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정황 드러남
- 이후 감사원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감사 착수 및 신고 접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악의적 조치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
-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철저한 감사로 ‘제2의 정의연’ 막아야” 등의 제목으로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 이후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나랏돈으로 ‘집 사고, 말 사고’...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적발” 등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비영리영역 전반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

3. 정의연 오보사태와 시민운동의 위축

-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악의적 주장은 많은 경우 정의연 사태와 함께 언급되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이 됨(실제 발언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 언론들이 특정 사안과 정의연 사태를 병렬적으로 구성)
- 전국 352개 시민단체의 상설적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경우 정의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과 여론몰이를 우려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이후 보수단체의 검찰 고발과 언론의 비난 기사들에 시달렸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내용임(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정정 및 반론보도)
→ **조선일보 <[단독]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명의로 뺨뺨기였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6월 8일 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관련 기사에서, 연대회의는 현 정부 들어서 정부의 여러 핵심 정책에 동조해왔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비를 낸 적이 없는 일부 단체가 연대회의의 회원단체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본부, 월드비전은 연대회의에 가입 초기 회비를 납부하다가 회비를 10년 이상 미납하는 등 회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입은 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연대회의는 현 정부 들어서 정부의 핵심 정책에 동조해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의제들은 현 정부 이전부터 주장해온 것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보수 언론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는 보도는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로 회원 감소로 이어지거나 이를 우려하는 단체의 활동 위축으로 연결됨(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심각)

△ 조선일보 <[단독]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명의로 뺨뺨기였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한 상황임)

- 중간지원조직을 진보적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지원 거점으로 파악, 지원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설 민영 중간지원조직의 예산 삭감, 통폐합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
-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 보도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위축 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찰됨

4. 시민사회의 자체적 대응

-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관련 발언 및 조치와 언론의 도를 넘는 보도행태를 논평, 성명 등 형태로 대응, 전에 없었던 무리한 조치이나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한계가 존재
- 언론보도의 경우 애초 사실관계에 기반한 비판적 보도와 재발 방지가 목적이 아닌, 정부의 주장과 조치를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언론 응대에 미숙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의도된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답변 유도
- 시민사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주도하에 언론 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나 확산의 한계와 언론의 취재 속도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공유되는 한계를 보임
- 그간 시민사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단체들의 대응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강함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권한을 가지고 공정보도 감시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정의연호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